

『조선사회경제사』를 읽는다

李清源

『조선사회경제사』는 현재 경성 연희전문학교 교수인 白南雲 씨의 저서이다(改造社版 경제학전집 제61권). 그 내용은 민족공산제와 노예시대의 경제를 다루고 있으며, 금후 속간될 계획인 조선사회경제사의 제1권이라 한다.

그 구성은 緒論과 本論으로 되어 있으며, 서론은 다시 조선경제사의 방법론과 단군신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두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본론은 원시씨족사회, 원시 부족국가의 제형태의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서론의 제1장 조선사회경제사 방법론의 제1절 조선사연구의 방법론에는 ‘조선사의 연구는 바로 과거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의 변동과정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그 실천적 동향을 이론화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인류사회의 일반적 운동법칙으로서의 史的 변증법에 의해 그 민족생활의 계급적 제관계 및 사회체제의 역사적 변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그 법칙성을 일반적으로 추상화함으로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이윽고 전 인류사의 일부분으로서 세계사적 규모에서의 현대자본주의의 이식발전과정을 본질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지구상의 사회평원에의 진로를 제시할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이는 즉 조선사를 연구하는 태도-방법론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그 방법론의 일반적 규정을 가리키는 한, 많은 결함과 불충분함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들의 방법론이란,

“정치상의 모든 사건은 사회구성의 토대인 경제상 사건의 집중적 통일적 반영이므로, 우선 어떠한 역사연구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을 출발해야 하며, 그 각 시대의 구체적 특수성을 그 시대 국가형태의 관념형태와의 상호관련에 있어서 단지 역사적 자료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배열하는 것만이 아닌, 그 역사의 구체적 특수성에 대해, 즉 역사적 현상, 사건 사이의 관련의 의미와 의의를, 따라서 그 기원과 역할을 분명히 함에 의해 모든 역사적 자료의 단순한 수집, 파악, 서술보다 훨씬 커다란, 중국에는 역사적 합법칙성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그의 정치적 소속, 역할에서 오는 필연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일정한 정치적 소속, 견해는 정책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논문 「조선경제의 현단계론」(개조, 올해(1934년) 4월호)에 나타난 조선경제에 대한 개량주의적 방법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재래의 역사가가 이루지 못한 점을 과학적으로 바르게 규명하려는 태도는 얼마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곧 ‘우리들은 고전적 역사를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현대사학의 최고수준에 따라 인멸 혹은 묵살된 모든 자료, 모든 파편을 수집, 분석하여 통일적 민족생활의 발전사학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과거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미래에의 전망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사학의 실천성이 있으며 일반적 동향이 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라 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으리

라. 그 방법론이 정확한 유물사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군신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 등은 특히나 주목할 만한 조선 최초의 비판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화석화된 친족제도 용어의 분석을 통해 고대사회를 규명하고, 성씨(姓氏)의 분석으로부터 고대사회를 추상한 점 등은 종래의 역사가들이 해내지 못한 점이기도 하다. 나아가 본론 제8장 ‘원시씨족공동체’는 원시공동체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다. 여기에는 모계 씨족제부터 추장, 군장제까지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어 있다. 추장·군장의 선거제, 민족평의회, 공동묘지, 공동의 종교적 제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원시공동체를 규명하고 적확(的確)하게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제2편 원시부족국가의 제형태의 제1절, 3집의 부족동맹에 대한 개설에는 ‘.....즉 그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의 결과로서 모계씨족제에서 부계씨족제로, 부계씨족제에서 가장제로의 전하기轉化期에 있어서 그 내부적 변동 즉 사유재산의 출현, 권력 및 노예제의 발생 등등, 일련의 생산관계의 계급화가 동반되어 국가형성의 요소가 준비되었던 것이다. 즉 국가의 맹아는 민족공산체의 발전과정에서 있어서 체내에서 발아한 것이었지만, 그 기본적 추진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 바로 그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한 편으로는 공동체의 유대로서의 혈연관계가 이완 혹은 중단斷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공동재산으로서의 토지 및 축군畜群 등이 점차 개인적 소유로 변해갔는데 이러한 부의 축적과 함께 공산세대는 분열되어 갔다. 즉 혈연유대의 이완과 공동재산의 침해는 그 민족공산체의 파열과 동시에 우리 씨족사의 서광인 노예국가의 건설공사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이에 노예국가의 성립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한 번 더 씨족사회의 분열과정과 생산력의 발전을 분석할 것이다’라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원시씨족적인 종교적 공산제의 붕괴과정과 계급사회의 맹아시대에 따른 노예시대의 출현을, 그 시대의 생산력 발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은 매우 교훈적이다.

게다가 총결론에서 사노 마나부(佐野學)씨가 『일본역사의 연구』에서 일본에 전래된 조선 문화는 실은 지나(支那)의 문화이며, 조선의 것이 아니다 라며 조선 문화를 압살하려 한 것에 대해 ‘보다 고도의 문화를 유입하여 자국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화, 이용, 혹은 창조할 수 있는 사회적 생산력에 걸맞은 진전을 전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 하여 소위 조선 문화라는 것의 존재를 논하고 있는 점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더욱이 삼국시대 즉, 신라·고려·백제 시대의 중앙집권제 토지국유제, 관개정책 등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아니라고 하는 점도 전적으로 옳다. 조선역사상에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주장은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비록 논구(論究)의 전 과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완전히 타당한 사적유물론의 견지를 취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올바른 과학적 방법론의 파악과 적용은, 소위 학자적·진리탐구적인 학적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함에 의해 처음으로 금후의 속간을

보다 타당하게 과학적으로 서술할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李清源 「朝鮮社會經濟史」を讀む 『唯物論研究』26, 1934년 12월)